

건설산업 공생발전위 운영 1년

저가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의 성과를 남기고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제5차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 회의, 왼쪽 세 번째 정해돈 회장)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뚝뚝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공생발전위, 설비건설업계 애로사항 해결 노력 평가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양극화, 수직적 업무관행 등의 오랜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발족한 협의체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대형 발주기관 사장, 건설단체장, 대형·중소·엔지니어링·전문건설업계 대표, 건설근로자단체 등이 대거 참여해 현장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위원회는 그동안 7차례의 본회의와 17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면서 건설산업의 최대 난제였던 공정한 공사비 확보와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원도급자가 제값을 받아 제대로 시공하되, 하도급자·장비업자 등도 정당한 대가를 받는 구조 개선에 주력해 왔다. 또한 이를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등 다섯 건의 대책발표를 포함해 총 72개 과제로 이뤄진 건설산업 공생발전방안을 확정해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 원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에 실제 투입비용 반영,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 조정방안, 발주기관의 공사금액 합리적인 산정·조정방안 등을 개선했다.

또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하도급 부문 예정금액 대비 82% 미만→60% 미만) 및 통과점수 상향 조정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운영을 내실화 하여 적정 수준의 하도급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채무 불이

행인 경우), 보증심사기간 단축, 건설보증심사도 강화했다.

정해돈 회장, 원·하도급자 간 공생발전에 꼭 필요한 제도 개선 성과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10월 19일 개최된 제7차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공사비 상향조정 등 실질적인 많은 성과를 일구어냈으며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 저가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원·하도급자 간의 공생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과제들이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큰 자긍심을 느끼며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제들이 향후 더욱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후속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해돈 회장은 또 “공생발전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국토부에서 산하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1년간 발주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성과는 너무 미미하며 우리 기계설비의 경우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5건 밖에 발주되지 않았다”고 토로하며 “이는 정부가 공생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실무부서인 발주기관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므로 장관님께서 국토부 산하기관 등 전국 발주기관에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주신다면 동 제도가 자리잡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과 개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개선 성과

■ 하도급 적정성 심사 내실화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의 내용	공생발전위 개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저가하도급을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비합리적인 관련규정(82%이하를 저가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가격평가 적용 시 74%대까지 하락)으로 저가하도급방지 실효성 미흡 - 공공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저가하도급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저가하도급심사대상 및 기준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하도급률 82%→예정가격 대비 60% 요건 추가(입법예고 중)) - 하도급적정성 심사 통과점수 상향 조정(85→90점 이상)하여 저가하도급 방지효과 제고(하도급률 2.5% 상향 효과) - 하도급 계약변경 요구 예외사항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적용되는 예외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질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인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공개경쟁입찰,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요건은 유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 보유,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 적용 시 인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의 내용	공생발전위 개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으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실제 보증서 발급률은 저조(민간공사 더욱 심각함) - 건설산업정보망(KISCON)등을 통하여 발주자의 이행여부 확인 등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피해가 발생한 하도급자가 보증금을 청구하여도 지급받지 못함 - 개별 보증기관별로 보증약관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산업에 명문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사유 중 소규모 공사 기준을 하향 조정(4천만원 → 1천만원 미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직불 의무화(입법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자의 신청 없이 발주자 직불 의무화 · 보증서 발급·변경 시 보증기관이 하도급자에게 발급 내용을 통보토록 하여 발급상황 확인 지원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직불 확대를 전제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장비업자의 권리보호(원·하도급자는 각자 계약한 장비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체불 발생 시 보증기관이 체불금 지급) - 하도급대금 보증금 지급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보증책임 범위를 '채무 불이행'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정관리 신청 시 등도 보증금 수령 가능 · 보증금 청구 요건 중 '주계약 해지' 조항 삭제 - 보증금 청구 표준양식 및 제출 필요서류를 사전에 제시하여 업체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 최소화, 심사기간 단축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의 내용	공생발전위 개선 결과
- 국가공사는 5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지자체공사 2억이상 100억미만) 시행되고 있으나, 발주 물량이 극히 저조(11건 추진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모든 공사로 확대적용, 내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발주기관의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등 - 기계설비 주계약자 공동도급 금액 : 총 2,655억원

■ 표준품셈 · 실적공사비 현실화

- 실적공사비, 표준품셈에 실제 투입 비용 반영

■ 업체선별 내실화 및 공제조합 리스크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3개 공제조합(건설공제 · 전문공제 · 설비공제)이 자체적으로 보증심사 제도를 통해 부실업체 사전 스크리닝 추진

건설공제조합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건수 제한
전문공제조합	공사규모 · 손해율에 따라 심사수준 차등화
설비공제조합	신용도에 따라 담보징구 등 보증제한, 고액공사, 저가공사 심사 강화

○ 개선방안

-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구축
-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신용도 및 공사이행능력의 위험도 측정
- 조합원이 신청한 보증의 위험도가 높아 손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인수 거부 또는 추가담보 등을 통해 리스크 완화

■ 저가낙찰공사,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한 보증제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연간 보증거부가 5건 내외 수준으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입찰참여 제한기능이 제한적임

-전문·설비조합은 보증심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증대급금이 증가되고 있음

〈전문·설비조합의 보증대급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문조합	564	994	1,600	2,387
설비조합	85	166	150	176

○ 개선방안

- 건설공제조합 :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담보를 징구하되, 낙찰율, 저가낙찰 보증건수,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금액을 차등 적용
- 전문·설비공제조합 : 실질하도급낙찰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낙찰률, 발주자가 산정한 하도급 금액 대비 실제 하도급 낙찰을 받은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실시하여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보증거부 및 담보 요구

■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중장기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및 홍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는 건설(자정노력), 사회에 기여하는 건설(사회공헌), 국민과 소통하는 건설(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3개 대과제와 19개 소과제 확정 추진
- 윤리경영지수 개발과 안전경영 매뉴얼 제작, 건설인재채용 설명회, 법질서 준수 프로그램 도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약정, 취약계층 생활시설 보수, 아라뱃길 마라톤 등 SOC 홍보, 우수건설 시설물 사진공모전, 언론매체와의 공동 캠페인 등이 두루 포함됨
- 기부약정은 건설단체와 업체 임직원들이 월급의 ‘끝전’을 모금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을 돕는 사업이며, 생활시설 보수는 단체·업체 임직원들이 건설업 특성을 활용해 복지부 등과 함께 직접 취약계층 생활시설의 개보수 공사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실시할 예정임